



7월 4일(화) 11:00 (국무회의 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담당

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
평가총괄과

과장 김진남, 사무관 김진한
(044-200-2468, 2469)

새 정부 국정과제·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실시

-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청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.
-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, 일자리 창출 20점, 규제개혁·정책소통·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, 갈등관리·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.

2016년 평가	2017년 평가(안)
① 국정과제 50 - 핵심개혁과제(과제별 최대 ±2) - 협업(기관별 최대 ±1)	① 국정과제 50 - 혁신관리 및 협업(기관별 최대 ±2)
② 규제개혁 20	② 일자리 창출 20 ③ 규제개혁(일자리 규제개혁 포함) 10
③ 정책홍보 20	④ 정책소통 및 국민만족도 20 - 정책소통 10 - 국민만족도 10
④ 정상화과제 10	⑤ 기관공통사항 ±10
⑤ 기관공통사항 ±10 (정부3.0 ±5, 성과관리 ±3, 특정시책 ±2)	±10 (갈등관리 ±3, 현안관리 ±3, 인권개선 ±2, 특정시책 ±2)

- 국무조정실(홍남기 국무조정실장)은 7.4(화)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」을 보고하였다.

□ 2017년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한다.

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,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.

- ②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(국민만족도)도 중점 평가한다.

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하여,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하였다.

- ③ 갈등관리(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), 현안관리(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), 인권개선(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)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가감점으로 반영한다.

□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,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·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,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,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